전남 신품종 '강대찬 쌀' 논란 확산…전북서도 불매 움직임

품질 미흡에 잇단 불만…김제농협RPC '수매 불가' 현수막 내걸어
강진군 공공비축미 제외 이어 영광에서도 계획물량 외 수매 거부
농민들 근심 커지고 정부 수매 품종 탈락 우려…전남도 대책 고심

최근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유소에 전남의 벼 품종 '강대찬' 수매를 거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지역 명품 쌀로 인기를 끌었다가 품질 저하 논란에 휩싸인 벼 품종 '강대찬'〈5월 23일자 광주일보 6면〉에 대해 전남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불매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RPC)은 최근 전북 김제시 일대에 '2023년도부터 강대찬 벼 수매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제시에 따르면 최근 김제에서도 강대찬을 심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 정작 RPC에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강대찬은 지난 2021년께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새청무'를 잇는 전남 브랜드 쌀을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벼 품종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밥맛이 떨어지고 금세 누렇고 딱딱하게 굳는다'는 불만이 잇따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반품 사태가 일어났다.

김제시 관계자는 현수막에 대해 "강대찬 품질 논란이 전남뿐 아니라 전북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제 농가들로부터 '강대찬을 공공비축미에는 못 넣더라도 시장격리곡에는 꼭 넣어달라'는 요청도 적지않게 들어온다"고 밝혔다.

영광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영광RPC는 전남농기원에서 공동경작한 강대찬 벼 50㏊ 계획물량 외에는 수매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광RPC 관계자는 "강대찬이 보급종도 아닌데다 품종 간 순도를 유지해야 하니 별도로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일에는 영광군의회 김강헌 의원이 "전남도의 무책임한 농업행정에 대한 농가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라"는 발언을 했다. 품질저하 논란에 휩싸인 강대찬에 대해 영광군에서는 오히려 쌀 개발자 신서호 박사를 초빙해 강대찬 재배기술을 군민 200여명에게 교육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남도와 영광군은 올 가을 수확기에 소비자와 상인들의 강대찬 매입거부로 인한 판로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곳곳에서 강대찬 수매 거부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남지역 농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종자 보급에 앞장서길래 강대찬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수매 거부 사례까지 나오자 공공비축미 등 정부 수매 품종에서도 탈락해 '애물단지'가 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영암군의 대우RPC 관계자는 "강대찬을 올해까지 주력 품종으로 내세웠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쌀 품질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갈려 고민이 크다"며 "올해까지는 강대찬 4000t을 계약재배 했지만, 결과가 안좋으면 내년에는 재배를 포기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품종이 정착하려면 2년은 기다려야 한다지만 지금으로선 강대찬의 미래를 한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워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담양RPC측은 현재 강대찬을 수매하고 있으나, 소비자로부터 "밥이 딱딱해진다는데 불안하다"는 문의전화가 종종 걸려와 난처할 때가 많다고 전했다. 이석하 영광군농민회 사무국장도 "강대찬이 아무리 병해충과 도복(쓰러짐)에 강하다고 하지만 정작 주변에서 강대찬 농사를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며 "농가에서는 이미 쌀 품질 문제로 논란이 생기니 소문이 퍼져 재배를 꺼리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강대찬을 아예 공공비축미 품종에서 제외하고 육성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현실화되고 있다.

강대찬은 현재 전남의 20개 시·군에서 공공비축미로 선정됐는데,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공공비축미 변경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중 일부 시·군에서 공공비축미를 강대찬에서 다른 품종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강진군은 지난 22일 공공비축미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대찬을 공공비축미에서 제외한다는 안건에 대해 심의를 마쳤다. 강진군은 이번 주 내로 대체 품종을 지정해 전남도에 공공비축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가 사이에서 강대찬 품질에 관한 소문이 빠르게 돌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 농협, 농가에서도 긴장하고 있다"며 "이달 말 공공비축미 변경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에 맞는 농업정책의 변화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경찰 어리숙한 영장 관리 법정 증거능력 다툼으로 번져

마약사범 용의자 지인 차량에 체포영장 원본 놓고 왔다가 분실 1시간만에 되찾아 혐의 부인에도 징역 3년 6월

경찰의 어리숙한 영장관리가 법정에서 증거능력 다툼으로 번졌다.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경남 양산시에서 마약을 교부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A(54)씨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2개 팀으로 나눠 체포영장(지난해 11월 15일자 발부)을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소지하고 A씨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은 A씨가 지인의 차량을 탑승하고 현장에 나타나자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 원본이 담긴 가방을 차량 안에 흘렸고 A씨가 체포되자 놀란 운전자 지인은 가방을 실은 채 현장을 떠나버렸다.

원본 영장이 없어진 것을 안 경찰은 인근에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팀을 불러 A씨에게 사본 영장을 제시했다. 이어 달아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반환을 요청해 1시간만에 택시를 통해 원본을 되찾았다. 영장이 올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경찰은 A씨에게 원본 영장을 다시 제시하고 나서 차량에서 증거물품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체포 영장 원본은 피의자 신병 구속이나 주거지 수색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와 압수대상물에 대한 정보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다.

집행 후에도 영장에 집행 일시와 범위를 모두 기록하게 돼 있어, 집행이 적법했는지 권한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경찰은 이러한 영장 원본을 분실해 하마터면 A씨를 풀어 줄 뻔한 것이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의 영장 관리를 문제삼아 증거품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4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장 사본 제시에 따른 고지는 이뤄졌고 집행 후 원본 제시가 지체 없이 이뤄졌다"면서 "A씨의 체포 경위를 볼 때 사본과 원본을 제시한 시간과 장소를 보면 A씨에 대한 체포는 시급했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비온 뒤 바빠진 농촌 들녘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서창동의 논에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끌고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 등산로 영아유기 사망사건 수사 난항

3개월 넘게 실마리조차 못 찾아

최근 경기도 화성과 수원에서 영아유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광주경찰은 지난 3월 무등산 등산로에 숨진 채 버려진 영아유기 사건에 대해 3개월 넘게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 영아유기 사건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3월 5일 무등산 군왕봉 등산로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검결과를 통보 받고 DNA를 확보했지만 부모를 찾지는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110여일째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유기된 장소를 기준으로 모든 등산로 입구에 대해 탐문 조사를 벌였다. 유기 지점을 기준으로 등산로에 설치된 CCTV 10여대의 영상을 확보하고 영아가 들어 갈 크기의 가방을 메고 있던 등산객 100여명을 전수조사했으나 이들 모두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유기현장과 가장 가까운 CCTV가 1.4㎞가량 떨어져 있는데다 현장과 연결된 다른 길 중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길이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부검 과정에서 확보한 영아의 DNA를 토대로 광주지역 산부인과 출산기록과 비교한 결과 유기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영아가 광주지역에서 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남을 비롯한 타 지역 출생기록과도 DNA를 비교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확대수사 이후에도 특별한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다인 기자 kdi@